

현대건설 조합원 탈락 작전

회사측의 노조원 탈퇴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건설노조(위원장 김영호)가 탈퇴강요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공표하며 회사측과 맞서 싸우고 있다.

89년 12월 정주영 명예회장의 '사무직 노조 불필요론' 발언으로부터 시작된 현대건설의 노조말살책동은 2월 현재 1천3백여명의 조합원 이탈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도 탈퇴 강요 공작이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지난 2월 열린 임시국회에 탈퇴강요 부서장의 메모지, 정주영회장의 녹음테이프, 탈퇴조합원의 강요사실 인정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회사의 전

정을 무력화시킬 의도라고 노조측은 해석하고 있다.

또 회사측은 노조탈퇴 공작의 일환으로 조합비 공제중지 요청서를 제출케 하여 일방적으로 조합비를 공제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90년 10~12월 3개월 사이에만도 2백97명의 조합비가 공제되지 않았다.

노조는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회사측에서 90년 9월 현재 대리 이하 조합가입율 65%(1천5백34명)를 90년 말까지 그 절반 이하 수준인 30%로 탈퇴시키라는 지침을 수립하여 9월 14~5일 양일간 실시된 마북리 인력개발원 교육 등에서 시달하고 이를 강력히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받아 이를 노조에 접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노조에서 팩시밀리로 접수된 탈퇴원서는 처리할 수 없음을 통보하자 조합비 공제중지 요청 수법을 이용 노조탈퇴를 성사시켰다.

이러한 사례는 말레이시아 남북고속도로 현장에서도 이용돼 현장소장의 탈퇴강요에 의해 조합원 21명중 18명의 탈퇴원서를 받아내 이를 집단으로 접수시키기도 했다.

특히 노조측은 회사측의 탈퇴강요를 입증할만한 진술과 녹음테이프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부 조사반은 이러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노조측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증거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일차

현대건설 노조말살책동도 심각

메모지 한장에 조합원 탈락 목표치 오고거

조직체계가 조합원 탈퇴강요에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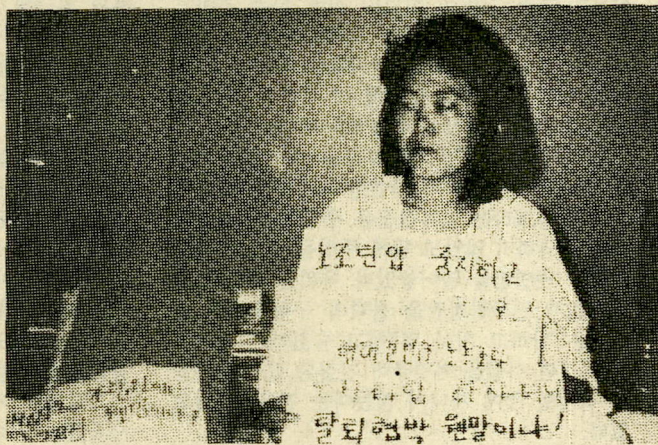
노조측이 밝힌 자료는 부서장들의 메모, 해외휴가자 탈퇴강요 사례, 본사-현장간 탈퇴강요 사례 등이다.

부서장들의 탈퇴압력 관련 메모는 해외토목부 오아무개 차장의 메모 '본부장님 지시사항-노조 30%', 같은 부서 김아무개 부장의 메모 '집중적으로 처리요망...각 현장,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방법' 등의 비교적 간단한 메모다.

그러나 노조는 이 간단한 메모가 사실상 엄청난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은 오아무개 차장의 '본부장님 지시사항-노조 30%'라는 메모 내용은 대리 이하 노조 가입율을 30% 이하가 되도록 탈퇴시키라는 내용이라며, 이같은 내용은 여러 사업본부 부서장의 메모에서도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아무개 부장의 '각 현장,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방법'은 현장에서 등기나 내용증면으로 탈퇴의사를 송부하여 노조의 탈퇴의사 확인과 설득과



노조와해공작으로 해고된 현대건설노조 김은옥전문화부장

아울러 조합비 공제중지 요청서 제출과 탈퇴원서의 내용 증명 송부 등 구체적 방법까지 회사측에서 제시해 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본사-현장간의 유기적인 탈퇴 강요 사례를 볼 때 보다 명확해진다.

노조측 폭로자료에 따르면 회사측은 90년 7월 4일 본사에서 쿠웨이트 KIST현장소장, 원아무개 과장, 이아무개 과장 앞으로 팩시밀리로 이용 노조탈퇴 원서를 송부해, 이를 작성케 하고 본사 팩시밀리로 되돌려

적인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국회 노동위는 재조사를 요구한 상태로 다음 회기에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는 나오게 됐다.

그러나 노조측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회사측을 비호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을 항의방문, 조합원 지위 원상회복과 조합비 공제 보장 등을 요구하는 한편 조합원의 탈퇴를 방지하고 재규합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취재부〉